

# 2026년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    |  |    |       |
|----|--|----|-------|
| 성명 |  | 점수 | / 100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http://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 조달 범위 분석표에 물품·용역·공사만 적혀 있다. 교재의 다차원적 범위 분석을 보완하는 묶음은?
  - 총액계약·단가계약·확정계약·개산계약
  - 수요자·공급자·재원·시장·정책·업무 범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물품의 제조연도만 추가하는 것
- 구매기관은 예산 내 높은 품질을, 공급기업은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공공계약이므로 공급기업의 경제적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해가 대립하면 합법적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 협력관계이면 어떤 가격도 검토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이행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가격·비용 배분에서는 이해가 대립할 수 있다.
- 공공조달 감사가 과거 부정행위의 적발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되는 방향은?
  - 조달 계획 자체를 없애는 기능
  - 향후 위험은 미발생 사실이므로 검토에서 전부 제외하는 기능
  - 향후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예방하는 관리 기능
  - 계약상대자의 가격 결정을 대신해 주는 기능

4. 분산형으로 전환한 뒤 각 기관이 유사한 시장조사와 계약검토를 따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다. 주된 관리 과제는?

- (1) 모든 공급자의 가격을 기관마다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 (2) 최종 사용기관의 수요를 더 늦게 전달하는 것이다.
- (3) 기관별 구매내역을 상호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4) 중복 업무와 전문성 분산을 보완할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5. 제한경쟁의 참가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자격요건을 통과했으니 기술평가에서도 최고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참가요건 통과는 낙찰평가 만점과 같은 의미이다.
- (2) 참가자격 충족과 낙찰평가 점수는 구분한다.
- (3) 자격을 통과하면 다른 업체의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
- (4) 기술점수는 참가요건 충족 순서로 정한다.

6. 몇 년 전에 작성한 지명후보 명부를 계속 이용하려 한다. 교재의 선별적 입찰 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는?

- (1) 폐업한 업체도 명부의 수를 맞추기 위해 계속 지명한다.
- (2) 한 번 등재한 업체의 자격은 이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3) 기술·자격·공급능력 변화를 확인하여 후보 명부를 최신화한다.
- (4) 등재 순서만 매년 섞으면 명부 검토를 대신할 수 있다.

7. 특정 업체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최초 구매가격 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위험은?

- (1)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비용도 생길 수 없다는 위험
- (2) 납품 이후 구매목적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위험
- (3) 같은 성능을 가진 대체 공급자가 너무 많다는 위험
- (4) 후속 유지보수·확장 때의 공급자 종속과 협상력 약화

8. 소액구매에서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는 주된 취지로 적절한 것은?

- (1) 작은 구매금액에 비해 과도한 거래·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
- (2) 작은 금액이면 구매 목적과 재원을 확인하지 않기 위한 것
- (3) 여러 구매를 숨겨 예산 규모를 줄여 보이기 위한 것
- (4)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9. 조달자료를 재고·회계·생산 등 조직의 내부업무와 함께 통합 관리하려 한다. 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성요소는?

- (1) 단독 가격표 이미지
- (2) ERP
- (3) 입찰공고의 제목 문자열
- (4) 물품의 개별 모델명

10. 벤처나라 지정에 따른 지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구매량과 매출액이 보장된다.
- (2) 지원제도 활용과 실제 계약 성과는 구별하여 평가한다.
- (3) 제품 홍보와 공공기관의 접근성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상담회와 교육·컨설팅 정보가 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1. 이음장터의 '구해요'와 '팔아요'가 나타내는 거래정보의 방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구해요—직원 채용시험 / 팔아요—예산편성 의결
- (2) 구해요—계약위반 제재 / 팔아요—법령 공포
- (3) 구해요—기관의 필요한 서비스 / 팔아요—업체의 공급 가능한 서비스
- (4) 두 메뉴 모두 완료된 계약의 하자기간만 표시한다.

12. 교재가 설명하는 번호 체계의 연결로 적절한 것은?

- (1) 물품식별번호는 UNSPSC의 세부품명번호 그 자체이다.
- (2)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세부품명번호 8자리 / 식별번호 2자리
- (3) 물품분류번호 8자리 / 국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4) 모든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다.

13. UNSPSC를 활용하는 주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1) 거래 참여자들이 공통된 제품·서비스 분류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 (2) 모든 국가의 조달법령을 하나로 폐지하기 위해서
- (3) 각 업체의 은행계좌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 (4) 각 제조모델의 국내 식별번호를 직접 발급하기 위해서

14. 가상 심사기준은 일정 요건의 창업기업에 경영상태 항목을 만점 처리하되 다른 항목은 그대로 심사하도록 정했다. 요건을 갖춘 A업체의 처리로 적절한 것은?

창업기간·금액·배점은 실제 규정값으로 묻지 않으며 지문에 제시한 심사 특례만 적용합니다.

- (1) 동일 지원이므로 직접생산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
- (2) 창업기업의 입찰가격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3) 경영상태 만점이므로 종합점수도 만점으로 기록한다.
- (4) 경영상태에는 정해진 만점을 적용하고, 납품능력 등 나머지 항목과 최종 통과 여부는 별도로 심사한다.

15. 재활용 원료를 썼다는 업체의 자체 광고만 있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GR 인증제품으로 구매실적을 분류하기 전 필요한 판단은?

- (1) 재활용 원료 사용 사실과 해당 제품의 GR 인증 유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2) 제조업체가 다른 품목의 GR 인증을 보유하면 이 제품에도 자동 적용한다.
- (3)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광고에 있으면 GR 인증제품으로 분류한다.
- (4) 신제품보다 저렴하면 GR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분류를 적용한다.

16. 가상 LCC 평가에서 장비 구입비는 1,000만 원, 1·2년 말 운영비는 각각 100만 원, 2년 말 처분 수입은 200만 원이다. 현재가치 계수는 1년 말 0.9, 2년 말 0.8이다. 다른 비용이 없을 때 순비용 현재가치는?

교재의 생애주기비용 개념에 현재가치 조건을 추가한 독립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종합낙찰 산식이 아닙니다.

- (1) 1,330만 원이다.
- (2) 1,170만 원이다.
- (3) 1,000만 원이다.
- (4) 1,010만 원이다.

17. 업체가 우선구매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으므로 기관은 해당 제품을 정해진 수량만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의 기본 구조를 검토한 설명은?

- (1) 인증서에 제품명이 있으면 기관별 구매수량도 확정된다.
- (2) 인증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기관의 수요·규격·계약 절차에 따른 구매결정은 구별된다.
- (3) 우선구매 대상이면 필요한 기능과 다른 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 (4) 기술 인증 취득은 기관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바로 발생시킨다.

18. 교재의 우수제품 지정대상 표에서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경로를 검토한다. 업체가 특허등록 자료만 준비하고 제품의 품질 소명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보완 방향은?

이 문항은 2026년 6월 교재 304쪽에 제시된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경로의 자료 구성을 묻습니다.

- (1) 모든 기술 경로는 서로 다른 제출 규정 없이 특허증만 요구한다.
- (2) 특허 경로는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3) 해당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었는지와 함께 그 경로에서 요구하는 품질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 (4) 특허권자가 맞으면 기술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19. 기관이 사회적기업과 필요한 돌봄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부서는 이를 “사회적 목적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고하려 한다. 적절한 구별은?

- (1) 판로지원 효과가 있더라도 해당 지급은 서비스 구매계약의 이행에 대응하는 대가로 관리한다.
- (2) 사회적기업 구매대금은 기업에 대한 출자금과 같다.
- (3) 사회적 목적이 포함되면 계약상 성과확인 은 제외한다.
- (4)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향후 계약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20. 사업부서가 공급기업 설명회 자료에 공개 요구규격과 봉인 관리 중인 예정가격 결정액을 함께 넣었다. 검토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 (1) 요구규격을 공개하므로 예정가격 결정액도 언제나 함께 공개해야 한다.
- (2) 설명회 참석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면 특정 참석자에게만 결정액을 줄 수 있다.
- (3) 공개할 사업조건과 비밀 관리해야 할 예정가격 정보를 구별하여 설명회 자료를 정리한다.
- (4) 예정가격의 비밀을 지키려면 요구규격과 참가조건도 모두 숨겨야 한다.

21. 국가계약의 공고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개찰 절차를 정했다. 업체는 개찰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유효한 전자입찰도 무효가 되는지 묻는다. 적절한 설명은?

- (1) 입찰자가 개찰실에 출석하지 않으면 전자입찰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전자조달을 이용하는 경우 공고한 절차·방법에 따라 개찰할 수 있으므로, 현장 불출석만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 (3) 전자개찰에서는 공고한 개찰 방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 (4) 현장에 온 업체만 대상으로 전자입찰가격을 다시 제출받아 순위를 정한다.

22. 2026년 6월 11일 시행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장의 심사·조치 기간과 ㉡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의 재심 청구 기간을 연결한 것은?

- (1) ㉠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 ㉠ 30일 이내, ㉡ 15일 이내
- (3) ㉠ 20일 이내, ㉡ 결과 통지일부부터 20일 이내
- (4) ㉠ 15일 이내, ㉡ 최초 입찰공고일부부터 30일 이내

23. 공공조달 관련 조사에 필요한 과세·거래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려 한다. 자료 확보 권한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법령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에서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보호 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 (2) 다른 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면 조달담당자가 개인 사업 분석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3) 자료가 비공개 성격이면 법령이 정한 요청 권한도 존재할 수 없다.
- (4) 조달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업의 세무자료를 목적 없이 수집할 수 있다.

24. 종합쇼핑몰의 특정 규격에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자는 이를 곧바로 “해당 법인의 모든 종류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지하려 한다. 적절한 대응은?

- (1) 특정 규격의 조치이면 해당 규격 주문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 (2) 규격별 조치는 제품명만 바꾸면 같은 물품으로 즉시 우회할 수 있다.
- (3) 조치의 법적 근거·대상 범위·효력을 확인하여 거래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구별한다.
- (4) 거래정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상 규격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입찰이 자동 금지된다.

25. 계약조건이 정한 전용계좌에 노무비와 하도급대금을 구분해 관리 중이다. 원도급자가 이를 일반 운영비 계좌처럼 쓰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지정된 지급 용도·수취인과 계좌 운용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임의 전용하지 않는다.
- (2) 계좌를 나누면 어떤 금액이 어느 수취인에게 갔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다.
- (3) 원도급자 명의 계좌이면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4) 대금 지급 전이면 법정 관리 의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무시한다.

26.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신청자가 자격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재에 따른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계정을 발급받았으면 신청자료의 진위는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
- (2) 허위 신청 사실은 입찰금액이 낮을수록 법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 (3)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모든 기능의 이용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 (4) 이용 신청·승인에 관한 거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27. 의무적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를 받은 계약에 해외 공급자도 참여시키려 한다. 교재에 따른 법적 검토는?

- (1) 의무 대상이 아니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항상 금지된다.
- (2) 의무 대상 여부와 규정이 허용하는 국제입찰 실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 (3) 해외 업체 참여를 허용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국제입찰 기준금액 이상으로 바뀐다.
- (4) 국제입찰을 임의로 하면 적용 규정과 공고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

28. 낙찰 후 계약 전, 과거 계약에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직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없으며 이번 입찰의 다른 무효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판단은?

- (1) 신고된 사유의 조사와 실제 제한처분의 유무·효력, 이번 입찰의 독립된 자격 문제를 구분한다.
- (2) 낙찰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적법한 제한처분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 (3) 처분이 아직 없으면 이번 입찰에서 별도의 허위자격이 확인돼도 검토하지 않는다.
- (4)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제한처분이 발효한 것으로 본다.

29. 정보화 용역의 계약문서가 누출금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원이 그중 비공개 보안구성 자료를 외부에 전송한 사안의 적절한 검토는?

- (1) 자료를 보낸 뒤 계약이 종료되면 누출행위의 검토도 사라진다.
- (2) 계약에 지정된 정보의 범위와 실제 누출 행위를 대조하여 해당 제재 사유를 검토한다.
- (3) 용역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4) 파일 소유자가 국가이면 공개 홈페이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같은 비밀이다.

30. 학습용 사례는 환수액을 “기관에 실제 적용한 단가와 더 낮은 비교 시장단가의 차이 × 대상 납품수량”으로 정했다. 두 단가는 각각 9만 6천 원·9만 원, 대상 수량은 150개이다. 환수액은?

가상 산식과 수치이며 시장가격 비교의 동등조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 (1) 1천4백40만 원
- (2) 1천3백50만 원
- (3) 6천 원
- (4) 90만 원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가상의 기술평가에서 신뢰성 60%, 편의성 40%를 반영한다. 각 항목 100점 만점으로 X는 90·60점, Y는 70·85점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결과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X 78점, Y 76점으로 X가 2점 높다.
- (2) X 75점, Y 77.5점으로 Y가 2.5점 높다.
- (3) X 150점, Y 155점으로 Y가 5점 높다.
- (4) X 90점, Y 85점으로 X가 5점 높다.

32. 업체가 운송손해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재해 시 대체 납품계획을 없애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금전손해 보전과 필수 물품의 적기 공급은 별개의 문제다.
- (2) 보험 가입이 대체 물품을 자동 생산한다.
- (3) 보험 가입은 모든 자연재해의 발생을 막는다.
- (4) 보상 가능성이 있으면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33. 작년 계약단가와 올해 견적단가를 비교하려 한다. 작년 가격은 설치비 포함, 올해 가격은 설치비 제외다. 적절한 처리로 옳은 것은?

- (1) 설치비 포함 여부는 물품 비교와 관계없다.
- (2) 포함 범위와 시점을 맞춘 뒤 차이를 분석한다.
- (3) 두 가격의 산술평균을 내면 범위 차이가 해소된다.
- (4) 숫자가 낮은 올해 가격을 즉시 저렴하다고 판정한다.

34. 공급자가 많은 표준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하다. 신규 업체는 경쟁 가격을 맞추면 원가도 회수하지 못한다. 합리적 검토는?

- (1) 손실이 발생하면 구매기관이 부족분을 자동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 (2) 시장 규모가 크면 손실 투철도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 (3) 원가개선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 여부를 따져 진입을 결정한다.
- (4) 한 번 낙찰되면 이후 계약은 경쟁 없이 보장된다고 본다.

35. 가상의 제조에서 재료 40개×2만원, 직접노무 30시간×3만원, 기타 경비 20만원이 들고 다른 제조원가는 없다. 제조원가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210만원
- (2) 190만원
- (3) 130만원
- (4) 170만원

36. 공급중단 원인을 목록화한 뒤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하고, 허용 기준과 비교해 대책을 정하려 한다. 허용 기준과 비교하는 활동은?

- (1) 제품 목록번호 부여
- (2) 위험 요인 식별
- (3) 위험성 평가
- (4) 검사대금 정산

37. 공고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업체는 자신이 판매하는 장비의 세부품명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우선 대조할 사항은?

- (1) 보유한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자릿수가 업종코드보다 긴지이다.
- (2) 장비 판매가격이 용역 예정가격보다 높은지이다.
- (3) 물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연관된 모든 용역 업종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 (4)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면허 코드와 업체의 해당 업종 등록 여부이다.

38. 공개된 규격에 특정 제품만 가진 외형 치수가 요구된다. 업체는 동일한 설치공간과 성능을 충족하는 다른 치수를 제안하려 한다. 적절한 의견은?

- (1) 필수 안전성능까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다.
- (2) 기능·설치 적합성을 입증하며 동등한 대안 허용 필요성을 설명한다.
- (3) 자사 제품에만 맞는 다른 치수로 바꾸어 달라고만 요구한다.
- (4) 다른 치수가 있으므로 현재 규격을 조사 없이 위법이라고 확정한다.

39. 기관이 공개한 규격에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보인다. 적절한 대응은?

- (1) 공개된 문서이므로 상위 법령 검토가 면제된다고 본다.
- (2) 규격에 서명하면 어떤 강행규정 위반도 치유된다고 본다.
- (3) 관련 근거와 충돌 지점을 특정해 정정 필요성을 질의한다.
- (4) 의심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무효라고 공표한다.

40. 입찰 마감 직전 기관이 동일 장비의 설치장소를 1곳에서 멀리 떨어진 5곳으로 변경하려 한다. 운송·설치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정 관리에서 함께 검토할 것은?

- (1) 담당자와 먼저 통화한 업체에만 새 장소를 알려준다.
- (2) 모든 참가예정자에게 변경을 알리고 견적 재작성에 필요한 제출기한 조정도 검토한다.
- (3) 총 수량이 같으므로 가격 영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 (4) 낙찰 후 추가비가 발생하면 변경 사실을 처음 공개한다.

41. 공고가 일정 비용을 계약 이행 후 자료 검토로 확정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공급업체의 손익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사후 검토 조건이 있으면 원가증빙을 만들 필요가 없다.
- (2) 모든 일반 확정가격 계약도 아무 근거 없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 (3) 명목상 제시금액과 최종 확정대가의 차이 가능성·증빙요건을 확인한다.
- (4) 제시금액은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확정 이익이라고 본다.

42. 업체가 ㉠ 장비의 기존 설비 연동방식과 ㉡ 계약보증 제출조건을 묻고자 한다. 공고에 기술부서·계약부서 연락처가 구분되어 있다. 적절한 연결은?

- (1) ㉠은 기술·사업 담당 창구, ㉡은 계약 담당 창구를 우선 활용한다.
- (2) 연락처가 구분되어 있어도 모든 질문은 경쟁업체에 묻는다.
- (3) 두 질문 모두 평가위원 개인에게 연락한다.
- (4) ㉠은 민원 신고창구, ㉡은 장비 제조사만 이용한다.

43. 공식 공고의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절차는 대표사 작성, 구성사 승인, 대표사 전자제출로 구분된다. 대표사가 협정서 초안을 만들었으나 구성사의 승인과 최종 전자제출이 남아 있다. 필요한 다음 처리는?

해당 공식 공고에 명시된 공동수급 전자제출 절차를 적용한다.

- (1) 대표사의 초안 작성만으로 구성사 승인과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 (2) 공동수급체 내부에 초안이 있으므로 공고상 제출 절차는 필요 없다.
- (3) 구성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표사가 정해진 방법으로 협정서를 전자제출한다.
- (4) 구성사가 승인하면 대표사의 전자제출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44. 업체가 “우리만 공급한다”는 자사 홍보자료를 근거로 단일공급 수의계약을 요청했다. 기관이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검토할 자료는?

- (1) 업체가 자체 작성한 독점 문구만 반복해 제출하게 한다.
- (2) 가장 가까운 업체라는 사실만 확인한다.
- (3) 원가가 비싸다는 사실을 독점권 증거로 본다.
- (4) 권리·공급권의 범위, 대체품 및 다른 공급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이다.

45. 평가 전 업체의 두 행동 중 ㉠ 지정된 공식 질의창구로 제안서 작성기준을 묻는 행위와 ㉡ 평가위원 개인에게 비공개 설명기회를 요청하는 행위를 구분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공식 창구를 거치면 모든 업체에 공개된 기준도 질문할 수 없다.
- (2) ㉠과 ㉡은 모두 문서 작성과 관련되므로 같은 공식 절차이다.
- (3) ㉠은 공통 절차에 따른 질의이고, ㉡은 사전접촉 금지 등 공정성 관련 규정 검토 대상이다.
- (4) ㉡은 설명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 공식 질의로 바뀐다.

46. 용역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준비한다. 기존 요구사항과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가장 적절한 협의 주제는?

구체적 변경의 허용 범위는 적용 계약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 문항은 기술협상의 기본 성격을 묻습니다.

- (1) 평가가 끝난 뒤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도록 필수 자격요건을 없애는 것
- (2) 제안한 수행방법의 구체화, 투입인력의 역할, 보고·지원 방식의 조정
- (3) 기존 입찰과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바꿔 경쟁 없이 부여하는 것
- (4) 가격 숫자만 논의하고 수행 내용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47. 교재에 인용된 협상계약 기준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제안서 제출 전에 작성하고 참가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가격을 본 후 그 가격에 맞춰 예정가격을 만드는 처리의 문제는?

교재에 인용된 작성기준을 문제에 제시하여 판단합니다. 현행 예규 전체 대조는 별도입니다.

- (1) 가격을 본 후 작성하면 모든 참가자의 원가가 자동 검증된다.
- (2) 제안가격과 예정가격이 가까우면 작성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3) 예정가격은 모든 협상계약에서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
- (4) 사전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독립적인 가격근거 요건에 어긋난다.

48. 동일 규격의 소모품이 대량으로 필요하지만 어느 한 업체도 전체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다. 업체별 가능한 수량과 단가를 받아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 나누어 선정하려 한다. 교재상 적합한 방식은?

- (1) 개별 직원의 선호 브랜드 투표이다.
- (2) 희망수량경쟁입찰이다.
- (3) 필요한 수량을 정하지 않고 가격만 공개하는 수요조사이다.
- (4) 완료 실적만으로 한 업체에 전체 물량을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49. 가상 규격적합 입찰은 필수 처리용량 100 이상을 통과조건으로 정한다. 업체 A는 용량 80 제품을 30% 싸게 제안했으며 예외·대체규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처리는?

필수규격과 대체불가 조건이 유효한 가상 입찰입니다.

- (1) 가격이 낮으면 필수규격이 권고규격으로 바뀐다.
- (2) 할인율을 처리용량에 더해 용량 110으로 인정한다.
- (3) 규격미달 업체에게만 제품 교체기회를 주고 처음 가격을 유지한다.
- (4) 가격할인과 별도로 필수규격 미충족을 판단한다.

50. 업체가 자사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 제안서의 모든 비공개 원가·기술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 달라고 한다. 적절한 정보 확보 방향은?

- (1)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경쟁사 비밀정보의 보호가 자동 소멸한다.
- (2) 경쟁사 자료가 보호되면 자사 평가결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 (3) 경쟁사 직원을 사적으로 설득해 내부 원가표를 받는다.
- (4) 쟁점 확인에 필요한 평가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요청하고 경쟁사의 보호대상 정보와 구분한다.

## 공공계약관리

51. 계약서에 적법하게 편입된 문서의 적용 순서가 “계약서 → 특수조건 → 규격서”로 정해져 있다. 계약서는 설치교육을 포함하지만 규격서에는 물품 배송만 적혀 있다. 강행규정 위반이나 별도 변경합의는 없다. 이 충돌을 해석하는 기준은?

문서가 유효하게 편입되었고, 제시한 우선순위 약정의 적법성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 (1) 규격서에 교육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교육 조항도 당연히 삭제된 것으로 본다.
- (2) 약정한 문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교육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
- (3) 세부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규격서를 계약서보다 먼저 적용한다.
- (4) 가장 이행하기 쉬운 문서를 계약상대자가 선택한다.

52. 확정된 작업범위를 이행하는 데 총 120인일이 필요하다. 작업 가능한 기간은 20일이고 각 작업자는 하루 1인일을 수행한다. 업무 분담과 병렬 작업이 가능하며 추가 계약은 없을 때 필요한 최소 상시 작업인원은?

모든 수치는 가정입니다. 법정 배치기준이나 안전상 적정인원 산정이 아닙니다.

- (1) 6명
- (2) 8명
- (3) 4명
- (4) 5명

53. 계약상대자가 추가 작업비 1천만 원의 산출자료를 첨부한 변경 청구서를 제출했고 기관은 접수번호만 부여했다. 아직 필요성과 금액에 대한 검토·합의는 없었다. 현재 상태를 바르게 기록한 것은?

금액은 가상 청구액이며 지문 외의 간주승인 조항은 없습니다.

- (1) 청구서가 서면이면 계약상대자가 기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 (2) 접수번호가 발급되었으므로 1천만 원의 증액이 확정되었다.
- (3) 변경 청구는 접수되었으나 변경금액의 승인·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승인이 없으므로 접수 및 검토 이력도 기록하지 않는다.

54. 민법 제390조상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별도의 무과실 책임 약정 등은 없다. 해당 조문의 단서에 따른 판단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고 특별법·특약에 의한 별도 책임도 없다고 확정한 사례입니다.

- (1) 손해배상 예외가 적용되면 반대급부·반환 문제도 모두 같은 결론으로 확정된다.
- (2) 공공기관이 채권자이면 무과실 이행불능이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는다.
- (3)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귀책사유 확인 없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 (4) 그 무과실 이행불능에는 제390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예외가 적용된다.

55. 대금채권 분쟁 중 채무자의 재산 처분 우려에 대응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담당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으니 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도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고한다. 적절한 구별은?

- (1) 가압류는 당사자의 계약을 자동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바꾼다.
- (2) 가압류를 신청하면 이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3) 가압류 신청서 제출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 (4) 재산 보전과 본안에서 권리·금액을 확정하는 판단은 구별한다.

56. 분석장비 계약은 3년간 사용 가능한 필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장비는 정상 작동하지만 인도된 사용권은 1년 후 만료된다. 조건 이행에 관한 판단은?

3년은 가상 계약상 약정 기간입니다.

- (1) 물리적 장비의 수량이 맞으면 사용권 관련 자료를 검사하지 않는다.
- (2) 현재 작동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사용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 (3) 인도 당일 작동했으므로 남은 사용권 기간은 계약 범위 밖이다.
- (4) 사용권 부족분은 어떤 합의도 없이 장비의 잔존가치와 상계된 것으로 본다.

57. 기관의 도면 제공이 3일 늦었지만 그 기간은 다른 작업이 진행되어 최종 준공일에 영향이 없었다. 별도로 공급자 귀책의 핵심 공정 지연 4일이 준공을 늦췄다. 지연 분석에서 적절한 접근은?

공정 영향은 지문처럼 입증된 것으로 가정하며, 구체적인 지체상금 법정 요율은 묻지 않습니다.

- (1) 기관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공급자 지연 4일도 모두 기관 책임으로 본다.
- (2) 두 사건의 달력상 지연일 3일과 4일을 무조건 더해 7일로 계산한다.
- (3) 각 사건의 발생일수뿐 아니라 최종 이행기한에 미친 영향을 구분한다.
- (4) 핵심 공정인지와 무관하게 먼저 발생한 사건에 모든 지연을 귀속한다.

58. 시험기관 보고서는 장비의 소음 측정값만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계약은 소음 외에도 출력·전기안전·부속품을 요구한다. 보고서의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 (1) 외부 시험기관 결과는 기관의 검사에 어떤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2) 소음 항목의 확인 근거로 활용하되 나머지 계약 요구도 별도로 확인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 (3) 한 항목의 시험성적서가 적합하면 전체 계약의 검사도 합격이다.
- (4) 소음 적합 판정을 부속품 수량 확인 결과로 바꾸어 기록한다.

59. 정산합의서에 “납품대금은 이 금액으로 정산하되 지연 손해에 관한 쟁점은 별도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내부 보고는 “당사자의 모든 청구가 소멸”이라고 적었다. 적절한 수정은?

합의 문구가 유효하고 다른 포괄적 청구포기 합의는 없습니다.

- (1) 한 쟁점이 유보되었으므로 납품대금 정산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 (2) 유보된 쟁점은 담당자의 보고 문구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3) 정산이라는 제목이 있으므로 유보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4) 합의로 정산한 범위와 명시적으로 유보한 지연 손해 쟁점을 구별한다.

60. 인수가 끝난 장비에서 기능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 하자보증·사후관리 검토의 초기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개별 계약의 책임 성립 여부와 보증기간 숫자는 제외합니다.

- (1) 기능 이상이 있으면 사용상의 원인과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 책임으로 확정한다.
- (2) 인수가 완료되면 어떠한 하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 (3) 결함 내용과 발생 시점, 원인 자료 및 계약상 보증조건을 확인해 처리 책임과 절차를 검토한다.
- (4) 모든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같으므로 계약문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61. 교재의 인용 조문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항목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업로드 교재에 인용된 조문의 범위 해석 문제이며, 현행 등록규정의 전수 확인은 배포 전 검수 대상입니다.

- (1) 전자등록 방식에서는 해당 인감·서명 서류 항목의 예외를 검토하되 다른 등록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2) 전자등록에서는 인감서류와 입찰서가 같은 문서가 된다.
- (3) 단서가 있어도 전자등록이라는 사실은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다.
- (4) 전자등록이면 필요한 허가·면허·제조 관련 서류까지 전부 면제된다.

62. 실제 구매에는 기존 장비 철거·새 장비 설치·폐기물 반출이 필요하다. 공고 가격조건은 “장비 가격”만 표시하고 부수 작업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적절한 수정은?

- (1) 견적에 포함할 작업과 별도 부담할 항목을 계약조건에 명확히 표시한다.
- (2) 최저가 업체에만 개찰 후 부수 작업 전부를 추가한다.
- (3) 부수 작업은 항상 무료이므로 범위를 적지 않는다.
- (4) 업체가 알아서 포함할 것이라 기대하고 공고는 그대로 둔다.

63. 가상 소액수의 안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가 확정된 업체를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A는 마감일에 영업정지 상태였고 그 기간이 개찰 전날 끝났다. 다른 예외·변경 규정은 없다. 제시된 기준에 따른 판단은?

마감일 상태를 적용하고 별도 예외가 없다는 가상 공고의 조건이다. 현행 배제사유 전부를 확인한 문항은 아니다.

- (1) 견적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영업정지를 소급하여 해제한다.
- (2) 개찰일에 영업정지가 아니면 마감일의 상태는 언제나 무시한다.
- (3) 개찰일이 아니라 견적 마감일의 상태를 적용하므로, 사후 기간 종료만으로 해당 배제사유가 없어졌다고 처리할 수 없다.
- (4) 개찰 담당자가 원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격을 판단한다.

64. 가상 외자계약은 해외 장비대금 2만 달러와 국내 설치비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예산 검토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며 다른 비용은 없다. 원화 환산 총액은?

통화·환율·금액은 가상이고 세금·수수료·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1) 2,000만 원
- (2) 5,200만 원
- (3) 3,000만 원
- (4) 2,600만 원

65. 학습용 조정식은 “조정대상 금액×조정률”이다. 유효하게 확정된 조정대상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적용률이 -4%일 때 조정액과 방향은?

수치·식은 가상이며 물가변동 조정의 법정 성립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 (1) 5천만 원 감액
- (2) 하락은 어떤 계약에서도 조정할 수 없으므로 0원
- (3) 200만 원 증액
- (4) 200만 원 감액

66. 공고된 제안평가에서 ㉠ 실적금액·신용평가등급을 기준표에 대입하는 자료와 ㉡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법·사후지원 방안을 심사하는 자료를 구분한다. 적절한 연결은?

문제에서 제시한 평가구조에 한정하며 실제 기관별 분류와 배점은 해당 공고를 따른다.

- (1) ㉠은 정성적 평가, ㉡은 정량적 평가이며 모든 서술은 금액으로만 변환한다.
- (2) ㉠은 정량적 평가에 대응하는 증빙, ㉡은 정성적 평가에 대응하는 수행 설명이다.
- (3) ㉠은 숫자가 있으므로 증빙이 필요 없고 업체가 원하는 값을 써도 된다.
- (4) ㉡은 내용 심사이므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과 무관하게 작성한다.

67. 제안서 평가가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적절한 운영 원칙은?

- (1) 온라인으로 바뀌면 참가업체마다 서로 다른 배점을 적용해도 된다.
- (2) 평가 매체의 변경과 평가항목·배점·자료 취급 기준을 구분하여 공정한 절차를 유지한다.
- (3) 온라인 평가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은 읽지 않고 접속 시간만 평가한다.
- (4) 온라인 평가이면 모든 제안서와 영업비밀을 일반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68. 시설분야 용역 심사표에는 경영상태와 별도로 근로조건 이행계획 항목이 있다. 두 항목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1) 신용등급이 높으면 근로조건 계획도 내용을 보지 않고 만점이다.
- (2)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근로조건 이행 계획은 서로 다른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 (3) 근로조건 계획을 제출하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간주된다.
- (4) 임금·근로조건은 계약 이행과 무관하므로 심사표에 둘 수 없다.

69. 등록된 본품을 선택한 뒤 별도 선택품을 추가하려 한다. 공급자 안내에는 해당 선택품이 계약 범위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조치는?

- (1) 선택품이라는 이름이면 어떤 계약에도 추가할 수 없다.
- (2) 선택품의 계약 등록·조합 가능 범위와 납품요구 조건을 확인한다.
- (3) 선택품 가격을 본품 단가에 숨겨 넣으면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 없다.
- (4) 본품 공급업체가 파는 물건이면 계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주문에 넣는다.

70. 반복 구매 가능한 상용화 서비스 A와 매번 최종 과업을 새로 협의해야 하는 비정형 서비스 B를 같은 MAS 등록 방식으로 검토한다. 먼저 확인할 차이는?

- (1) 규격 확정·상용화와 단가계약 가능성 등 대상 요건이다.
- (2) 상용화되어 있으면 기관이 어떤 가격 검토도 할 수 없다.
- (3) 서비스라는 이름이 있으면 세부 범위가 없어도 같은 단가로 등록할 수 있다.
- (4) 비정형이면 공공조달의 어떤 계약방법도 이용할 수 없다.

71. 교재의 용역 MAS 종합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두 업체의 합산점수는 같고 A는 사후관리 점수가 더 높지만 B는 제안가격이 더 낮다. 다른 예외가 없을 때 먼저 적용할 판단은?

교재가 설명하는 해당 용역 MAS 기준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다른 계약방식의 기술점수 우선규칙과 혼용하지 않는다.

- (1) 동점 시 사후관리 취득점수를 먼저 비교하므로 A를 선정한다.
- (2) 사후관리 점수와 가격의 우열이 반대이면 두 업체를 모두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동점이면 공고·규정의 순위 기준 대신 담당자가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 (4) 합산점수가 같으면 사후관리 점수와 관계없이 가격이 낮은 B를 먼저 선정한다.

72. MAS 계약을 유지하는 업체가 “최초 계약 때 적격성을 통과했으므로 이후의 이행실적은 재계약 검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계약관리 설명에 따른 판단은?

- (1) 계약이행실적과 위반 이력 등은 차기 계약·연장 검토에도 연결될 수 있다.
- (2) 계약 중 거래정지 이력은 다음 계약 전 제품 사진을 바꾸면 사라진다.
- (3) 최초 적격성 통과로 향후 모든 계약의 이행평가가 면제된다.
- (4) 재계약 여부는 최초 등록번호의 크기만으로 결정한다.

73. 카탈로그계약 업체가 상담 중 서비스 범위를 바꾼 홍보물을 보냈다. 기존 계약 카탈로그에 그 변경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는?

- (1) 내용 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용 규정은 보지 않는다.
- (2) 카탈로그 계약은 서비스 내용이 없어도 가격만 있으면 충분하다.
- (3) 업체가 새 홍보물을 보내면 등록 계약내용도 언제나 자동 변경된다.
- (4) 승인·등록된 카탈로그와 실제 제안 변경의 범위·절차를 대조한다.

74. 공사 발주계획의 예정 착공일은 정했으나 용지 확보와 필요한 인허가의 완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발주자가 우선 보완할 것은?

- (1) 입찰을 공고하면 용지와 인허가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
- (2) 총사업비만 확정하면 현장 접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 (3) 착공에 필요한 법적·물리적 선행조건과 예상 완료시점을 사업 일정에 반영한다.
- (4)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도 무조건 시공사 지연 책임으로 처리한다.

75. 가상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설계 80점 이상인 입찰자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한다. A는 설계 96점·가격 100억 원, B는 85점·92억 원, C는 79점·85억 원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선택 대상은?

설계 통과점수와 가격은 가상 조건이며 교재 예시의 모호한 문구를 법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1) B이다. 설계 기준을 통과한 A·B 중 가격이 낮다.
- (2) C이다. 전체 가격이 가장 낮다.
- (3) A와 B의 설계점수 평균이 80을 넘으므로 가격에 관계없이 추첨한다.
- (4) A이다. 설계점수가 가장 높다.

76. 가상 심사규칙은 수행능력 기본점수와 가점을 더하되 수행능력 합계를 30점으로 제한하고, 그 후 가격점수를 더한다. 기본 29점, 가점 3점, 가격 64점이면 종합점수는?

모든 배점·상한은 가상이며 추가 감점이나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 (1) 96점
- (2) 30점
- (3) 93점
- (4) 94점

77. 가상 변경정산은 추가 인정액 500만 원에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되 변경시점의 유효한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한다. 계약 요율 8%, 적용 상한 6%이며 다른 항목은 없다. 해당 승률비용은?

요율·금액·상한은 모두 학습용 값이며 실제 특정 비용의 법정 요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10만 원이다.
- (2) 40만 원이다.
- (3) 70만 원이다.
- (4) 30만 원이다.

78. 기술제안입찰을 ㉠ 발주자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남는 경우와 ㉡ 발주자의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을 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구별의 핵심은?

-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의 구체화 수준과 이후 설계·시공 책임 범위가 다르다.
- (2) ㉡은 실시설계가 있으므로 시공성·공기·비용 개선 제안을 할 수 없다.
- (3) 두 방식은 이름만 다르고 입찰 시점의 설계 완성도 차이가 없다.
- (4) ㉠은 기본설계이므로 낙찰 후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79. 일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지만 아직 시공되지 않았다. 이 계약에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 기성 인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가 반입 사실만으로 전부 시공 완료 기성으로 청구했다. 적절한 판단은?

지문은 일반 자재이고 반입 자재에 대한 별도 기성 인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정합니다.

- (1)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재는 시공 완료와 동일하다.
- (2) 자재가 구매되었으면 설치 위치·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가 완성된다.
- (3) 반입·보관 상태와 시공 완료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상 기성 인정 기준을 확인한다.
- (4) 일반 원칙과 달리 인정하는 예외가 없더라도 업체 장부에 올리면 예외가 생긴다.

80. 하도급지킴이 처리내역에서 한 건의 상태가 “청구 승인”이고 실제 계좌 지급 완료 내역은 없다. 보고서가 이를 “수령 완료”로 기재했다. 적절한 수정은?

- (1) 승인은 항상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 완료와 같은 뜻이다.
- (2)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순간 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 (3) 청구·승인·실제 지급 상태를 구분하고 지급 완료를 확인한 뒤 수령 결과를 기록한다.
- (4) 미지급 상태는 업무상 불리하므로 승인 날짜를 지급 날짜로 사용한다.

# 답안 기록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    |    |    |    |    |    |    |    |    |    |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    |    |    |    |    |    |    |    |    |    |